



사진=매일노동뉴스

공안탄압 분쇄, 법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건설노동자 채용 요구가 범죄?

지난 5월 1일 검경은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 잡겠다며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6월 2일 서울 남부지법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새 건설 현장에 단체협약을 적용하려 했던 활동을 싸잡아 '공갈·협박·강요죄'로 규정하고 간부 1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건설노조에 대한 검경 및 사법부의 탄압은 한국사회를 19세기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행태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야만의 시절, 19세기 독일 사회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를 '공갈'로 간주해 사법처리한 바 있다.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노조가 어떤 내용으로 교섭을 하건, 어떤 방식으로 교섭을 맺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인데, 일개 검찰과 경찰, 하급심이 이를 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임시일용직의 채용' 요구는 '정규직의 고용안정' 요구와 같은 말

건설노동자들은 건설 공기가 끝나면 다음 일자리-일거리를 걱정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다음 공사현장에서 본인을 채용하

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1년 중 3개월은 일을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에겐 다음 일자리-일거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고용안정이다. '비정규직의 채용·고용승계' 요구와 '정규직에겐 해고반대' 요구, 문구만 다를 뿐, 의미는 같은 말이다.

정상적인 고용체계에서 상용직에게는 일감이 없을 때 휴업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다.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반영된 제도다. 그런데 그 휴업수당을 아끼려고 임시일용직을 확대해놓고, 고용승계·고용보장 요구는 '경영권 침해'로 간주한다?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 '노동권'이 무언지도 모르는 무지의 발로다. 이 하급심은 시민권 형성의 역사를 되돌린, 최악의 오심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합원 고용보장' 요구는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계약갱신' 요구와 같은 말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노동조건을 개선시켰다면 이 노동조건이 다음 일자리에서 지켜질 수 있는지도 걱정해야 한다. 노임단가 수준 보장, 화장실 설치, 안전시설 확충 등 기초적인 협약들이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조합원 채용도 거부한다. 더 낮은

노임단가로 일하려는 비조합원을 채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발주한 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 덤프노동자들은 15톤 덤프 한 대로 하루 8시간에 38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일해 왔다. 그런데 시공사인 대방건설은 하루 10시간에 38만 원으로 바꾸려고 한국노총 조합원, 비조합원을 채용한다. 15톤 덤프 하루 임대료가 전국 평균 45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공기업) 발주의 공사인만큼 단가를 올려줘야 할 판에, 시공사가 이를 역행해서 덤프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채려 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 고용 보장' 요구는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합원, 비조합원 할 것 없이 더 나은 노동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제도 개선 요구에는 묵묵부답 노동권 보장 요구에는 노조탄압

퇴직금 공제제도를 건설기계 종사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치권은 묵묵부답이었다. 적정임금·적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해 왔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건설기계 노동자에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도, 직접 시공 확대 요구에도, 체불임금 및 유보임금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에도 정치권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래놓고 정치권은 건설노조의 활동을 조폭 무리배들의 공갈·협박·강요와 같다고 우기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투쟁하며 정권의 무능을 폭로해 왔다. 이런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반실업자·반취업자, 임시일용직, 비정규직의 노조운동을 송두리째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

건설노조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건설노조의 압도적인 단결력이다. 검경의 돌출행동에, 사법부의 일탈행위에, LH공사의 노노분열 책동에 주춤할 이유가 없다. 더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더 많은 조합원 가입과 더 힘 있는 단결된 투쟁으로 건설노조 탄압을 분쇄하고, 법제도 개선을 향해 나가야 한다.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이은 하청노동자의 죽음, 무엇을 할 것인가 위험 · 안전 업무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끝없는 산재 사망

지난 6월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의 가스폭발 · 붕괴 사고로 건설 하청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쳤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죽었다. 위험업무가 외주화 되어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남양주 지하철 폭발 · 붕괴사고는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여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고, 매일ENC가 하청으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안전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산소절단기 가스호스와 가스통 · 산소통은 작업이 끝나면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 원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원청의 책임 떠넘기기

건설현장의 중층적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사비용 중 안전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



추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원청은 산재예방 책임과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지난 6월 28일 발생한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에서도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감추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발주처는 시공사에, 다시 원청은 하청에게로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다.

구의역 사고도 마찬가지다. 전동차를 고치고, 역무실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업무도 하루에 서울시민 8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과 직결되고, 365일 상시적인 업무다. 하지만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외주용역화한 것도 모자라, 인력부족으로 2인 1조 안전수칙도 지킬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을 방치했다. 벌써 3번째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이런 외주화가 만든 참사였다.

사고 낸 원청을 처벌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

연이어 터진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생명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는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자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기업과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유해위험 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입법 추진을 해야 하고, 20대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우선법안으로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 개정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 스스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유해물질과 위험작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기 어려운 외주하청 노동자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쳐 투쟁하자!

끝내자 재벌세상 나쁜정권

2016 6월

-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6.25 전국노동자대회
- ▶6.28 확대간부 파업 결의대회
- ▶6.29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2016 7월

- ▶노동자·시민 살리기 범국민 서명 국회 전달
- ▶전국 현장순회 및 간담회
- ▶대시민 선전전

2016 7.20

- ▶7.6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
- ▶공공운수노조 지역 순환파업 시작

2016 7.22~23

- ▶금속노조 재벌개혁 총파업 상경투쟁
- ▶재벌개혁 시민 한마당

2016 8.22~23

- ▶현장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20년!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2016 9월 10초

- ▶2차 총파업.총력투쟁

2016 11월

- ▶20만 민중총결기 (전국노동자대회)

2017년

- ▶전략총파업
- ▶대선투쟁 승리

이렇게 실천합시다!

- ▶단위사업장에서 중식집회 및 출퇴근 선전전 진행, 결의성명 발표 등 함께합시다.
- ▶총파업.총력투쟁 승리 현수막을 각 단위사업장별로 게시합시다.
- ▶교육없이 투쟁 없다! 사업장별 2016년 총파업.총력투쟁 교육과 토론을 진행합시다.
- ▶지역별 주요 거점에서 진행되는 대시민 선전전에 참여합시다.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7.20 총파업대회에 꼭 함께합시다!

월간 오늘날보다

오늘을 보는
노동자의 시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전망

오늘, 우리에게
사회운동의 미래를 만드는 변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길을 함께 찾아갈 구독자를 기다립니다.

정기구독료 연 4만원 / 월 4천원

todayboda.net
today.boda@gmail.com
02-778-4001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